제4차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
최종자체평가보고서
2018-20

대한민국정부

목 차

Ⅰ. 서론 3

Ⅱ. 국가실행계획 절차 4

Ⅲ. IRM 권고 사항 5

Ⅳ. 국가실행계획 공약의 이행 7

Ⅴ. 결론 및 향후 계획 38

Ⅰ 서론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은 정부의 투명성 증진, 부패 방지,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협력하는 국제 협의체이다. 열린정부 구현 활동을 보다 구체적이고, 이행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2개년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1년 OGP 가입 이후 총 네 차례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을 수립해 이행해오고 있다. 그간 공공정보와 데이터 공개, 시민참여, 기술과 혁신을 통한 공공서비스 접근성 제고, 반부패 및 공직윤리, 재정 투명성 제고 등 다양한 분야의 열린정부 활동을 2개년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을 통해 추진해왔다.

대한민국 정부의 제4차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은 다수이해관계자포럼인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이 출범하고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동수립한 첫 번째 계획이다. 수립 절차, 일정, 과제선정 방법 등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결정하고, 국민·시민사회·정부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했다.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 민간위원들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① 정보공개 및 데이터 개방, ② 시민참여, ③ 반부패 등 3대 분야로 분류해 제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부기관의 참여를 확보한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 제4차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은 정보·데이터 공개, 반부패 등 기존 국가실행계획 과제뿐만 아니라 문화·외교·안전·관세 분야를 새롭게 포함하는 등 7개 기관의 13개 과제를 담고 있다.

최종자체평가보고서는 매뉴얼과 공동창조기준을 준수해 2018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이행한 제4차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에 대한 이행과정, 독립보고메커니즘(IRM) 권고사항, 공약별 추진성과와 향후 계획을 담고 있다.

II 국가실행계획 절차

OGP 주기 전반의 참여와 공동창조

제4차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은 민관협의체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 정부·시민사회위원이 공동수립한 만큼, 수립부터 이행 점검 및 평가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온 것이 특징이다.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은 OGP 참여 및 공동창조 기준을 준수하여 제4차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의 기본방향, 수립 방법과 절차, 일정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입법부·사법부·중앙행정기관·시민사회·국민이 참여하는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200여 명이 참석한 킥오프 행사에서는 아이디어톤 형식의 회의를 통해 과제를 발굴하기도 했다. 이후 약 한 달 반 동안 공모한 제안은 좋은 공약 만들기 워크숍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숙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국가실행계획 이행과정 중 참여와 공동창조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은 2018년 9월부터 분기별 정례회의를 통해 제4차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각 공약별 이행기관은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 회의에 참석해 각 기관이 수립한 2019년 계획을 브리핑하기도 했다.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은 2019년 5월 민간위원 행정개혁시민연합이 주도하는 청년워킹그룹을 구성했다. 청년워킹그룹은 대학생 등 청년 60여 명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서, 공약 이행기관을 직접 방문해 이행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는 실제 제5차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에 제안되기도 했다. 이처럼 제4차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은 지난 세 차례 국가실행계획보다 민관협의체 중심으로 국민 참여와 공동창조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III IRM 권고 사항

OGP는 독립평가기관(Independent Reporting Mechanism, 이하 "IRM"이라 한다)의 보고서를 통해 각 회원국의 국가실행계획 수립과 이행을 점검하고 개선에 필요한 권고를 제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의 제4차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에 대한 IRM 수립 보고서(Design Report)에서, IRM 연구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권고하고 있다.

IRM 권고사항
1. 적극적인 홍보와 협의를 통해 OGP 활동에 국민 참여를 확대한다.
2. OGP 의장국 우선과제와 관련된 도전적이고, 세부적인 공약을 수립한다.
3. 국민과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다양하고, 도전적인 데이터 과제를 포함한다.
4. 기존 참여 플랫폼과 메커니즘을 강화함으로써 예산 수립에 국민참여를 도모한다.
5. 내부고발자 보호에 대한 인식을 강화함으로써 내부고발과 반부패를 증진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IRM 연구원의 권고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제4차 국가실행계획의 이행과 후속 계획을 마련함에 있어 적절한 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이의 실행을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였다.

1. 적극적인 홍보와 협의를 통해 OGP 활동에 국민 참여 확대

제4차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 수립평가보고서에서 IRM은 민관협의체를 넘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협의체계를 구축하라고 제언했다.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은 2019년 2월 포럼을 개편하여 포럼 위원뿐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실제 대학생 등 청년 100여 명이 참여하는 청년워킹그룹을 구성하는 등 포럼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제5차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 수립 시 더 많은 정부·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웨비나를 개최해 계획 수립 절차·방법, 제안서 작성 방법 등을 안내했다.

2. OGP 의장국 우선 과제와 관련된 도전적이고, 세부적인 공약 수립

대한민국은 2020~21년 OGP와 78개 회원국을 대표하는 의장국으로 선출되어 마리아 바론(Maria Baron) 시민사회의장과 공동비전을 마련하고 국제사회에 비전을 공표했다. 시민영역·국민참여, 반부패, 디지털 혁신을 3가지 분야를 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78개 회원국이 국가실행계획에 비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5차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에도 OGP 의장국 우선 과제가 잘 담길 수 있도록 수립할 것이다.

3.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다양하고, 도전적인 데이터 과제 포함

대한민국 정부는 OECD 데이터 개방지수 1위 등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확보하며, 데이터 분야를 주도하는 국가로 활동하고 있다. 데이터 과제는 지난 네 차례 국가실행계획에 빠지지 않는 과제이다. 제5차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 수립에서 데이터 개방 뿐 아니라 국민의 수요에 대응하는 시빅해킹 지원 체계 등을 논의하고 있다. 실제 데이터는 COVID-19 대응 당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정부와 시민사회가 협력하는 주요한 요소였다. 정부가 개방한 마스크 보유 데이터를 민간이 활용해 마스크 구매처와 수량을 알려주는 앱을 개발하기도 했다. 이처럼, 데이터가 우리 실생활에 공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도전적인 과제를 포함할 계획이다.

4. 예산 수립에 국민 참여 도모

IRM이 수립평가보고서에서 명시한 것처럼 대한민국은 국민참여예산제를 추진해 예산 수립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도모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참여예산제를 제5차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에 포함해 보다 다양한 국민이 우선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예산 결정과정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5. 내부고발자 보호에 대한 인식 강화를 통해 내부고발과 반부패 증진

제5차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의 주요 분야 중 하나는 반부패이다. 실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자는 제안을 과제로 채택해 숙의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제5차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에는 부패 척결을 위한 민관협력, 불공정 요인 개선 등이 반부패 과제가 포함되었다.

IV 국가실행계획 공약의 이행

대한민국 정부는 제4차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에서 민관협력형 부패방지 체계,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 검사 등 13개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2020년 8월 말을 기준으로 제4차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 이행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각 공약의 이행현황을 점검한 결과 8개 공약의 이행이 완료되고, 4개 공약의 이해가 상당 수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1개 공약은 제한적으로 이행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연번	과제명	주관부처	추진현황
1	시민과 정부가 함께하는 민관협력형 부패방지체계 확립	국민권익위원회	완료
2	공연장 기술정보 관리 통합 시스템 구축 제안	문화체육관광부	제한적
3	정책실명제 강화	행정안전부	완료
4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식품의약품안전처	완료
5-1	외교 정책에 있어서의 대국민 소통 및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한 국민외교 시스템 구축	외교부	상당 수준 완료
5-2	온·오프라인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 운영	행정안전부	완료
6	참여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정부혁신 국민포럼 운영	행정안전부	완료
7	국민 다소비·다빈도 식품별 유해물질(19종) 함유량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	완료
8	문화관광분야의 미래산업을 위한 데이터 개방	문화체육관광부	상당 수준 완료
9	문화유산자원 공개로 국민의 신산업 육성 지원	문화재청	상당 수준 완료
10	민간 활용도 높은 고수요·고가치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행정안전부	완료
11	민간의견 수렴을 통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강화	행정안전부	완료
12	자발적 법규준수 기반의 관세행정 체제로의 전환	관세청	상당 수준 완료

<table>
<tr><th colspan="5">1. 시민과 정부가 함께하는 민관협력형 부패방지체계 확립</th></tr>
<tr><td colspan="5">공약 이행 주기 : 2018. 9. 1. ~ 2020. 8. 31.</td></tr>
<tr><td>주관부처/담당자</td><td colspan="4">국민권익위원회/민간협력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양용석</td></tr>
<tr><td colspan="5">공약 내용</td></tr>
<tr><td>공공문제</td><td colspan="4">공직자 재산공개제도 도입, 공무원 행동강령 강화, 청탁금지법 제정·시행 등 한국 정부의 반부패와 관련된 그간의 정책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투명성기구의 2017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 따르면, 한국 부패인식지수는 54점(100점 만점)으로 180개국 가운데 51위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29위를 차지하는 등 국가청렴도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제까지의 반부패정책이 공직자들의 부패행위 근절과 처벌 강화에 초점을 둔 결과 집행과정에서 공무원들의 태만과 복지부동을 가져왔고 이는 국민들의 공직자에 대한 신뢰 상실을 가져온 결과이다. 그리고 부패라는 문제가 공직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반부패정책은 지나치게 공직에만 한정함에 따라 다른 영역의 부패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 못한 측면도 있다. 따라서 정부주도가 아닌 여러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의 반부패 접근방식이 요구되며, 이러한 인식에 따라 최근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여러 가지 반부패 정책 대안 제시와 함께 「시민과 정부가 함께하는 민관협력형 부패방지 체계 확립」을 국정과제로 확정되었다.</td></tr>
<tr><td>공약 내용</td><td colspan="4">이 공약은 국민이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반부패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민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하고 반부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수 있는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며, 국민의 반부패 정책참여 및 소통체계를 마련하고, 청렴사회를 위한 범국민 운동을 전 개한다. 이 공약의 이행을 통해 반부패 정책 추진에 있어 실질적인 민관 거버넌스 및 국민 참여가 가능 하게 되며 반부패 정책에 대한 공감도 확산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청렴도 제고가 이루어 질 수 있다.</td></tr>
<tr><td>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 활용 방법</td><td colspan="4">공약의 구체적인 추진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공공, 경제, 직능, 시민사회, 학계, 언론 등 사회 각계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반부패 정책의 제안·점검·평가에 참여하도록 한다. ② 반부패 정책의 수립·이행 과정에서 국민과 함께, 국민의 시각으로 반부패종합대책 및 파급효과가 큰 각 부처의 중요 대책을 재점검하기 위해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한편, 국민생각함을 활용하여 반부패 청렴정책에 대한 제안 평가 등 국민 참여를 활성화한다. ③ 사회 각계가 직능 분야별·지역별로 「청렴사회협약」을 체결하고 청렴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협력·지원 한다.</td></tr>
<tr><td>OGP 가치와의 관련성</td><td colspan="4">시민참여/반부패</td></tr>
<tr><td>추가 정보</td><td colspan="4">국정과제(2.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의 주요 내용이며,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에도 포함</td></tr>
<tr><td rowspan="2">이행 수준
(1개에 ○ 표시)</td><td>미착수</td><td>제한적</td><td>상당 수준 완료</td><td>완료</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구체적 활동내용</td><td colspan="4">▪ 민·관 거버넌스인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법조계 전관예우 근절 등 8건의 반부패·청렴정책을 정부에 제안하여 정책에 반영</td></tr>
</table>

	※ 1기('18.3.~'20.2.) : 민관협의회(9회)·실무협의회(8회)·6개 전문분과(100여회) 개최 ▪ 지역별·분야별 청렴사회협약 체결로 청렴문화 확산의 토대 마련 ※ (지역) 민선7기 17개 광역시장·도지사 청렴사회협약 체결('19.1.) 및 17개 광역시·도별로 구체적인 세부 청렴실천협약 체결('18.9.~'19.10.) ※ (분야) 국방분야('19.3, 21개 기관), 방위산업분야('19.6, 29개 기관·기업), 공기업분야('19.7, 35개 기관), 회계분야('19.10, 45여개 단체·기업) 협약 체결 ▪ 17개 광역시·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조례 공포 및 설치('18.6.~'19.5.) ※ 참여기관(474개) : 민간단체(196개), 공직유관단체(160개), 자치단체(102개), 중앙부처 소속기관(16개) ▪ 주요 반부패·청렴 이슈에 대한 국민모니터단 운영 ※ 일반시민·대학생 등 70명을 모니터단으로 선정, 온라인 설문조사와 2차례 토론회, 국민의견 수렴을 통해 '생활속 반칙' 해소 방안 도출
향후 계획	▪ 민·관 거버넌스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운영 효율화 방안을 추진 ▪ 민·관 거버넌스(청렴사회민관협의회)에 참여한 공공기관의 청렴문화 확산 노력과 청렴사회협약 이행을 점검·평가하는 체계 구축으로 이행력 확보 ▪ 시민사회단체 및 기업을 대상으로 청렴문화 확산 활동을 확대

이행과제 현황	시작일	종료일	이행수준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통한 반부패 정책의제 발굴	2018. 3. 6.	2020. 2. 25.	완료
청렴정채 국민모니터링	2018. 5. 1.	2019. 12. 31.	완료
'국민생각함'을 통한 반부패정책 상시 발굴·논의	2018. 7. 1.	2019. 12. 31.	완료
분야별·지역별 청렴사회협약 체결 지원·협력	2018. 9. 1.	2019. 5. 16.	완료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링 결과를 정책에 환류	2019. 1. 1.	2019. 12. 31.	완료

연락처		
주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담당자		양용석
담당 부서(과)/ 직책		민간협력담당관실/행정사무관
이메일/전화번호		y7073@korea.kr/044-200-7160
관련자	정부부처/부서	해당사항 없음
	시민사회단체 민간부문 다자기구 워킹그룹	
기타 정보		해당사항 없음

<table>
<tr><th colspan="5">2. 공연장 기술정보 관리 통합 시스템 구축 제안</th></tr>
<tr><td colspan="5">공약 이행 주기 : 2018. 9. 1. ~ 2020. 8. 31.</td></tr>
<tr><td>주관부처/담당자</td><td colspan="4">문화체육관광부 / 공연전통예술과 하현지</td></tr>
<tr><td colspan="5">공약 내용</td></tr>
<tr><td>공공문제</td><td colspan="4">좋은 공연을 관객에게 선보이기 위해 기술적 완성도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공연장 기술정보는 공연장이 가진 매우 다양한 기술적 요소들을 정리한 자료로 공연자들의 기술적 완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다. 무대설비(공연장 기술정보)에 대해서는 현재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극장기술정보DB에서 일부 공연장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통합 데이터 부재로 이용자 편의성 및 정보제공 측면에서 개선 여지가 크다.</td></tr>
<tr><td>공약 내용</td><td colspan="4">이 공약은 공연장 기술정보와 도면 등을 제공하는 공연장 기술정보 관리 통합 시스템 구축에 관한 것이다. 공공 및 민간 공연장에 대한 실사측정을 수행하여 정확하고 객관적인 기술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이를 기초로 국제표준에 따른 한국형 표준 극장 기술정보를 제시함으로써 공연장 이용자에게 기술정보의 전문성과 신뢰감을 제고한다. 그리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확대 구축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이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td></tr>
<tr><td>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 활용 방법</td><td colspan="4">공약의 구체적인 추진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현재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극장기술정보DB('18.8월 현재 70개 공연장의 26가지 무대설비와 도면 제공중)를 확대 한다. 무대설비의 구입 경로와 가격, 관리상황 등의 자료를 현 극장기술정보DB에 추가로 업데이트한다.
② 공공 공연장의 홈페이지에는 공연장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에 따라 기술정보 관리 통합 시스템에 연계하여 공연장 기술정보를 제공한다.</td></tr>
<tr><td>OGP 가치와의 관련성</td><td colspan="4">투명성 / 신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전달</td></tr>
<tr><td>추가 정보</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2">이행 수준
(1개에 ○ 표시)</td><td>미착수</td><td>제한적</td><td>상당 수준 완료</td><td>완료</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구체적 활동내용</td><td colspan="4">▪ 공공 공연장 기술정보 구축 및 기술정보구축 홈페이지 운영
- 2018년: 15개 공연장, 2019년: 10개 공연장, 2020년: 10개 공연장
- 전국 국공립 공연장 507개('19 공연예술실태조사 기준) 중 20.5%인 104개 공연장 기술정보 구축 완료</td></tr>
<tr><td>향후 계획</td><td colspan="4">▪ 공연장 기술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예산 확보 필수 전제)
- 장비 관리 시스템 구축, 통합 홈페이지 리뉴얼 등
▪ 공공 공연장 기술정보 구축 지속
▪ 민간 공연장 기술정보 구축 지속(공공 공연장 구축 완료 후)</td></tr>
<tr><td>이행과제 현황</td><td>시작일</td><td>종료일</td><td colspan="2">이행수준</td></tr>
<tr><td rowspan="2">공연장 사전조사
공연장 실태조사 및 인터뷰</td><td>2019. 1. 1.</td><td>2019. 12. 31.</td><td colspan="2" rowspan="2">제한적</td></tr>
<tr><td>2020. 1. 1.</td><td>2020. 12. 31.</td></tr>
</table>

DB용 기술정보 수집·정리		2019. 1. 1.	2019. 12. 31.	제한적
		2020. 1. 1.	2020. 12. 31.	
DB구축 및 검증·수정		2019. 12. 31.	2019. 12. 31.	제한적
		2020. 1. 1.	2020. 12. 31.	
연락처				
주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		하현지		
담당 부서(과)/ 직책		공연전통예술과 / 주무관		
이메일/전화번호		hhj1225@korea.kr/ 044-203-2743		
관련자	정부부처/부서			
	시민사회단체 민간부문 다자기구 워킹그룹	전일주(소셜벤처'삼천원'공동대표, 교육청2창의예술센터 공연장 운영자문)		
기타 정보				

<table>
<tr><th colspan="5">3. 정책실명제 강화</th></tr>
<tr><td colspan="5">공약 이행 주기 : 2018. 9. 1. ~ 2020. 8. 31.</td></tr>
<tr><td>주관부처/담당자</td><td colspan="4">행정안전부/김민규</td></tr>
<tr><td colspan="5">공약 내용</td></tr>
<tr><td>공공문제</td><td colspan="4">대통령령인「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63조(정책의 실명 관리)에 제도적 근거를 두고 있는 정책실명제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담당공무원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공개대상 사업을 기관 입장에서 결정하는 등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되지 못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효과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td></tr>
<tr><td>공약 내용</td><td colspan="4">이 공약은 국민의 관점에서 정부정책의 민주성과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기존의 정책실명제 제도 를 강화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① 종전 기관에서 정했던 정책실명제 사업을 선정할 때 국민의 신청을 접수받아 검토하는 절차(국민신청실명제)를 도입·운영한다. ②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 제는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개요와 실명을 공개토록 한다. ③ 지금까지는 과장급 이하 실무자의 실명만 공개했지만 앞으로는 문서의 최종 결재자까지 실명공개 범위를 확대한다. ④ 기관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만 공개하던 정책실명제를 정보공개포털(www. open.go.kr)에서 통합적으로 공개한다.</td></tr>
<tr><td>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 활용 방법</td><td colspan="4">공약의 구체적인 추진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정책실명제 운영지침’을 마련, 각 기관에 배포하여 정책 실명제에 대해 알리고 시행하도록 안내한다. ② 필요시 전자정부시스템을 활용하여 실명 기록, 공개가 편리하도록 조치한다.</td></tr>
<tr><td>OGP 가치와의 관련성</td><td colspan="4">투명성 증진 / 책임성 강화</td></tr>
<tr><td>추가 정보</td><td colspan="4">해당 사항 없음</td></tr>
<tr><td rowspan="2">이행 수준
(1개에 ○ 표시)</td><td>미착수</td><td>제한적</td><td>상당 수준 완료</td><td>완료</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구체적 활동내용</td><td colspan="4">▪국민신청 정책실명제 도입을 위한「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개정(’18.11.)
▪중점관리 대상사업(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을 통해 사업 개요 및 문서 최종 결재자까지의 실명 공개(관련내용 연도별 운영지침을 통해 안내)
* 2018년 총 2,044건의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중앙: 981, 지방: 1,063)
* 2019년 총 2,107건의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중앙: 1,012, 지방: 1,095)
* 2020년 2분기 1,848건의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중앙: 980, 지방: 868)
▪정보공개포털(open.go.kr)과의 연계를 통해 기관별 중점관리 대상사업 통합 공개
* ‘공개정보 → 정책실명제’ 탭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공개
▪광화문 1번가를 통한 국민신청 정책실명제 신청·제출창구 추가 확대(’20.7.1.~)</td></tr>
<tr><td>향후 계획</td><td colspan="4">▪국민신청 정책실명제 홍보 강화를 통해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과정에서의 국민 참여 확대</td></tr>
</table>

이행과제 현황	시작일	종료일	이행수준
국민신청 정책실명제 도입을 위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		’18.11.27.	완료
중앙행정기관 홈페이지와 정보공개 포털(open.go.kr)과의 연계를 통한 중점관리과제 통합공개 실시	’18.5.1.	’18.5.31.	완료
2019년 정책실명제 운영지침 배포		’19.2.27.	완료
2020년 정책실명제 운영지침 배포		’20.2.24.	완료
광화문1번가 홈페이지 내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제출창구 추가 확대		’20.7.1.	완료

연락처		
주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자		김민규
담당 부서(과)/ 직책		정보공개정책과/행정사무관
이메일/전화번호		mg6446@korea.kr / 044-205-2263
관련자	정부부처/부서	해당 사항 없음
	시민사회단체 민간부문 다자기구 워킹그룹	
기타 정보		

<table>
<tr><th colspan="5">4.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th></tr>
<tr><td colspan="5">공약 이행 주기 : 2018. 9. 1. ~ 2020. 8. 31.</td></tr>
<tr><td>주관부처/담당자</td><td colspan="4">식품의약품안전처/고객지원담당관실</td></tr>
<tr><td colspan="5">공약 내용</td></tr>
<tr><td>공공문제</td><td colspan="4">최근 살충제 계란사건, 생리대의 휘발성 유해물질 사건 등으로 인해 국민 다소비 또는 사회적 이슈가 되는 제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내·외에서 위해정보가 노출되거나 국회나 언론의 지적 등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제품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로 소관 물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따라서 국민들이 제품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별도의 통로나 기회는 제한되고 있다. 그리고 검사 결과에 대해서도 부적합 내용 등 일부 정보의 공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검사결과에 따른 대응조치와 관련해서도 국민들이 참여하는데 한계가 있다.</td></tr>
<tr><td>공약 내용</td><td colspan="4">이 공약은 특정 식품이나 의약품에 대해 소비자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정부에 청원 형태로 조사를 요청하면 정부가 국민이 청원한 제품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국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현장을 반영한 정책을 통해 국민건강과 안전에 대한 정부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td></tr>
<tr><td>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 활용 방법</td><td colspan="4">공약의 구체적인 추진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국민청원 안전검사 사이트(petition.mfds.go.kr)를 구축·운영한다. ② 국민 다수가 추천한 청원에 대하여 안전검사 대상을 선정하고 검사결과의 타당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③ 제도 도입에 따라 초기에는 추천수가 상위인 물품에 대하여 검사하고, 추후 운영 사례를 분석하여 청원 채택기준 추천 수를 마련한다.</td></tr>
<tr><td>OGP 가치와의 관련성</td><td colspan="4">국민과의 소통 강화 및 투명성 확보</td></tr>
<tr><td>추가 정보</td><td colspan="4">안전검사 대상 수거·검사를 위한 예산 확보 필요</td></tr>
<tr><td rowspan="2">이행 수준
(1개에 ○ 표시)</td><td>미착수</td><td>제한적</td><td>상당 수준 완료</td><td>완료</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구체적 활동내용</td><td colspan="4">①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식약처 소관 식품·의약품·화장품 등 관련 제품에 대한 불안감으로 국민이 검사를 요청하면 일정수준 이상의 공감·추천 등을 받은 건에 대해 식약처가 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이다. 사용자의 청원 신청·추천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수거·검사 진행과정 및 검사결과 등 정보 제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19.12. 국민청원 안전검사 전용 사이트(petition.mfds.go.kr)를 구축하였다.

② 안전검사 대상 선정의 객관성·전문성 및 결과 타당성 여부 검토를 위해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분야별 총 10개분과로 이루어져 있으며, 소비자단체, 법조계 및 관련 분야 전문가 등 내·외부 위원 100명(외부95명, 내부5명)으로 확대('20.8)하였다.
* 10개 분과 : 총괄·식품·건강기능식품·축산물·용기포장·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의료기기·위생용품</td></tr>
</table>

	③ 제도 도입 초기 청원 채택기준 추천 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지만, 운영 사례 분석과 정책연구사업*을 통하여 국내 및 제외국 사례를 비교 검토 후 추천 기준수(2,000명)를 마련('19.1)하였다. *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대응전략 수립(한국소비자법학회) ④ 현재까지 총 10건*의 안전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보도자료, 국민청원 안전검사 전용사이트, 유튜브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검사결과에 따라 부적합 제품 회수·폐기, 수입 통관차단,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필요시 기준·규격 마련** 등을 통해 국민 불안감 해소 및 정부의 신뢰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 물휴지(1차, '18.6), 어린이용 기저귀(2차, 18.6), 파인애플 발효식초 음료(3차, '18.9), 한약재(4차, '18.12), 노니분말·환(5차, '19.3), 화장품 에센스(6차, '19.6), 단백질 보충제(7차, '19.9), 인공눈물(8차, '19.12), 수렴·유연·영양 화장수(9차, '20.5), 새싹보리(10차, '20.8) ** 어린이용 기저귀 : VOCs 방출량 및 함량 신규 시험법 마련('18.12), 노니 분말·환 제품 : 금속성 이물제거 장치 의무화 조항 마련('19.5) ⑤ 또한, 제도 도입 이래 국민이 참여하는 민주적 제도로 인정받으며 우수 정책 사례로 여러 차례 선정되었으며, 2020년 6월 행안부가 선정한 '2020년 국민과 함께 할 정책 BEST 17'에 선정되었다. * 행안부 혁신경진대회 대통령상, 인사혁신처 대한민국 올해의 정책상('18.12월) * 열린 정부 구현 OECD 공공분야 혁신사례('19.8월) * 제1회 정부혁신박람회 혁신우수사례 참여('19.12월)
향후 계획	▪ 분기별 안전검사 대상 지속 선정·수행 ▪ 온·오프라인 홍보 지속

이행과제 현황	시작일	종료일	이행수준
국민청원 안전검사 사이트 구축·운영	2019.6	2019.12	이행완료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 구성	2018.3	2020.8	이행완료
청원 채택 기준 추천수 마련	2019.1	2019.1.	이행완료

연락처		
주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		전윤영
담당 부서(과)/ 직책		고객지원담당관/주무관
이메일/전화번호		apple80@korea.kr / 043-719-1054
관련자	정부부처/부서	해당사항 없음
	시민사회단체 민간부문 다자기구 워킹그룹	해당사항 없음
기타 정보		

5-1. 외교 정책에 있어서의 대국민 소통 및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한 국민외교 시스템 구축				
공약 이행 주기 : 2018. 9. 1. ~ 2020. 8. 31.				
주관부처/담당자	외교부 / 정혜주 외무사무관			
공약 내용				
공공문제	최근 정부의 운영방식이 일방적 통치가 아닌 정부와 국민의 협치를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함에 따라 외교에 있어서도 국민의 역할과 참여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실제로 독일, 일본, 호주 같은 선진국은 전담 조직을 통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교정책 수립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여 문재인 정부도 외교정책 결정과정에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위한 「국민외교」를 국정과제로 채택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교정책 결정과정에서 국민 소통 및 국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환경 구축이 요구된다.			
공약 내용	이 공약은 국민 누구나 외교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창구인 국민외교센터를 온·오프라인 형태로 구축·운영하는 것과 관련된다. 이는 대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외교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고, 국민 참여와 국민의 외교 역량 결집을 통해 국민중심, 국익중심의 외교를 구현해 나가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다.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 활용 방법	공약의 구체적인 추진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외교부 1층 로비에 광화문 1번가 열린소통포럼과 함께 '국민외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 주요 외교 사안에 대한 국민의 여론 동향을 정교하게 파악할 여론 조사 및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외교부 맞춤형 국민 참여 모델 정립 후 정책 과정에 국민 참여 추진, 다양한 온·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국민 제안 및 의견의 상시 접수와 필요시, 각계각층과 의 소통 및 숙의 과정을 거쳐 해당 제안의 정책 반영 등을 추진한다.			
OGP 가치와의 관련성	외교 정책 과정에서의 대국민 소통 및 국민 참여 강화는 △외교 정책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확대, △ 정책 과정의 투명성 제고, △국민의 민주적 결정권 증대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에서, 동 공약은 OGP의 가치 및 취지에 부합			
추가 정보	"국민외교"는 현 정부 100대 국정과제이자 외교부 6대 국정과제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외교부 정부 혁신과제로써 외교 정책 과정에의 국민 참여와 대국민 소통의 필요성을 부내에 인식시킴으로써, 외교부 부내 혁신 메커니즘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이행 수준 (1개에 ○ 표시)	미착수	제한적	상당 수준 완료	완료
			O	
구체적 활동내용	- 2018년 5월 외교부 1층에 국민외교센터를 개소함으로써 국민외교 오프라인 플랫폼 구축 - 2018 국민외교 정책제안 국민 공모전에 접수된 다수의 제안을 바탕으로 국민외교 온라인 플랫폼(App) 구축 관련 외교부-업체-국민대표 간 회의를 진행하고, 2019년 6월 모바일앱 서비스 개시 - 2019 국민외교 UCC 공모전 대상 수상 제안을 반영하여, 국민 희망시 차세대 여권에 출생지 표기가 가능하도록 조치 - 2019년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의 범위와 방식 등」을 주제로 제1차 국민참여사업 실시, 확인된 국민의 심층의견을 영사조력법 하위법령			

<table>
<tr><td colspan="2"></td><td colspan="3">제정에 활용</td></tr>
<tr><td colspan="2">향후 계획</td><td colspan="3">▪ 2020년 12월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 관련 기후환경 외교」를 주제로 제2차 국민참여사업을 실시하여 국민의 심층의견 확인 후 정책 수립에 활용 예정
▪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여 대국민 소통 및 국민 참여 행사 개최
▪ 양재 국민외교센터를 추가개소하여 국민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센터 내 국민외교 행사 정례화를 통한 국민과의 쌍방향 소통 체계 강화</td></tr>
<tr><td colspan="2">이행과제 현황</td><td>시작일</td><td>종료일</td><td>이행수준</td></tr>
<tr><td colspan="2">대국민 여론 조사 및 국민 참여 사업 추진</td><td>2018.9.1</td><td>2018.12.31</td><td>완료</td></tr>
<tr><td colspan="2">대국민 여론 조사, 정책 토론 세미나, 국민 제안 수시 공모, 국민 참여 사업 등</td><td>2019.1.1.</td><td>2019.12.31</td><td>완료</td></tr>
<tr><td colspan="2">대국민 여론 조사, 정책 토론 세미나, 국민 제안 수시 공모, 국민 참여 사업 등</td><td>2020.1.1.</td><td>2020.8.31.</td><td>상당 수준 완료</td></tr>
<tr><td colspan="5">연락처</td></tr>
<tr><td colspan="2">주관부처</td><td colspan="3">외교부</td></tr>
<tr><td colspan="2">담당자</td><td colspan="3">정혜주</td></tr>
<tr><td colspan="2">담당 부서(과)/ 직책</td><td colspan="3">정책공공외교1과 국민외교팀 / 외무사무관</td></tr>
<tr><td colspan="2">이메일/전화번호</td><td colspan="3">hjjeong19@mofa.go.kr / 02-2100-8279</td></tr>
<tr><td rowspan="2">관련자</td><td>정부부처/부서</td><td colspan="3" rowspan="2">해당 사항 없음</td></tr>
<tr><td>시민사회단체
민간부문
다자기구
워킹그룹</td></tr>
<tr><td colspan="2">기타 정보</td><td colspan="3"></td></tr>
</table>

<table>
<tr><th colspan="5">5-2. 온·오프라인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 운영</th></tr>
<tr><td colspan="5">공약 이행 주기 : 2018. 9. 1. ~ 2020. 8. 31.</td></tr>
<tr><td>주관부처/담당자</td><td colspan="4">행정안전부</td></tr>
<tr><td colspan="5">공약 내용</td></tr>
<tr><td>공공문제</td><td colspan="4">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더불어 세종로 공원에 광화문1번가 소통창구를 설치하고 50일 동안 (2017.5.25.~7.12) 국민들의 생생한 정책의견을 접수한 바 있다. 정부는 광화문 1번가를 통해 총 18만705건의 아이디어를 접수받아 그 중에서 1천718건을 채택하였으며 99건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도 반영되었다. 이렇듯 광화문 1번가는 정책참여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보여준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 결정과정에서 의견 제시, 토론, 숙의 등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국민 참여요구에 수용하여 국민 입장에서 접근이 쉽고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는 채널이 필요하다.</td></tr>
<tr><td>공약 내용</td><td colspan="4">이 공약은 국민들의 정책참여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집단지성을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을 확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공약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고질적인 사회문제 및 생활불편 사항 등에 대한 토론과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국민과 함께 고민하여 정책결정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정책 공론장 운영, 기관별 분산된 참여창구를 쉽게 볼 수 있도록 상호 연계하고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에 원스톱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의 정책에 참여를 원하는 국민의 참여 폭을 확대시킬 수 있는 다양한 참여기제의 통합서비스 제공 등이 포함된다.</td></tr>
<tr><td>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 활용 방법</td><td colspan="4">공약의 구체적인 추진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오프라인 형태의 열린소통포럼을 국민, 전문가, 공무원 이 모여 국민 생활에 밀접한 사회문제를 논의하는 실질적인 국민정책 공론장으로 운영한다. 열린소통포럼에서는 정기적으로 열린소통포럼과 정책컨퍼런스가 개최된다. 이를 통해 정책 제안을 발굴하고, 발굴된 정책 제안을 관련 부처에 안내하여 실제 정책으로의 연계도 지원한다. 아울러 포럼 결과보고서를 각 부처에 공문으로 발송하여, 사후 회의 및 협의로 관련 부처가 협력하여 실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돕고 일련의 과정을 '국민참여의 날' 행사 및 백서 등으로 국민들과 공유한다. ② 온라인 국민참여플랫폼(홈페이지)을 통해 O2O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운영 중인 임시 홈페이지를 하반기에 정식 홈페이지인 온라인 국민참여플랫폼으로 개편하여 포럼 온라인 생중계, 실시간 댓글기능 및 국민 생각함·국민신문고 등 타 국민참여 플랫폼과의 연계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국민이 직접 사회문제를 상향식으로 정책 의제화하고, 정부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운영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질 것 이다.</td></tr>
<tr><td>OGP 가치와의 관련성</td><td colspan="4">시민참여</td></tr>
<tr><td>추가 정보</td><td colspan="4">2019년 소요예산 8.0억원
2020년 소요예산 12.0억원</td></tr>
<tr><td rowspan="2">이행 수준
(1개에 ○ 표시)</td><td>미착수</td><td>제한적</td><td>상당 수준 완료</td><td>완료</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구체적 활동내용</td><td colspan="4">공약의 구체적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온·오프라인 공론의 장을 제공하고, 기관별 국민참여제도를 한 곳에</td></tr>
</table>

	서 안내하는 광화문1번가 국민참여플랫폼 서비스 개시('19.1.31)하였다. 그리고 세종열린소통포럼을 추가 구축('19.5.17)하여 보다 많은 국민·공무원이 포럼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19.11월부터 국민참여플랫폼 제안 기능과 정부혁신 국민포럼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국민의견 수렴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토론·발전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열린소통포럼 개최 후 구체적 방안 도출을 위한 숙성과정을 도입('20)함으로써, 국민의견이 보다 많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국민 정책 참여는 보다 활성화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18년 개최된 총 10회의 포럼에 550명이 참석하였으며, 72개의 정책제안을 발굴하였고, 이 중 45개의 정책이 채택(채택률 62.5%)되었다. '19년 개최된 총 11회의 포럼에는 838명이 참석하였으며, 60개의 정책제안을 발굴하였고, 이 중 47개 정책이 채택(채택률 78.3%)되었다. '20년 개최된 총 6회의 포럼에는 2,493명이 참석하였으며, 37개의 정책제안을 발굴하였고, 이중 19개 정책이 채택(채택률 51.4%)되었으며 18개 제안이 검토중이다.('20. 11. 5. 현재). 대표적인 정책반영 사례로는,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파괴를 막기 위하여 아이스팩 전용 수거함을 설치한 사례(환경부), 서류제출 없이 온라인 청구만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절차를 간소화한 사례(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독거노인 등 가구에 응급상황 감지·호출기 등을 설치하여 119 구급·구조를 지원한 사례(보건복지부) 등이 있다.
향후 계획	'21년 열린소통포럼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비대면 시대 맞춤형 온라인 국민참여 숙의토론 과정을 개설한다. 이를 통해 국민참여 기회 및 창구를 확대한다.

이행과제 현황	시작일	종료일	이행수준
제10차 열린소통포럼 개최(2018)	2018.9.13	2018.9.13	완료
지역 컨퍼런스('섬'주제) 개최	2018.10.24	2018.10.25	완료
정책 컨퍼런스	2018.11.13	2018.11.13	완료
제1~8차 열린소통포럼 개최(2019)	2019.6.4.	2019.11.12.	완료
찾아가는 현장포럼 (광주,경남,세종)	2019.8.13.	2019.11.29.	완료
제1회 대한민국 정부혁신박람회 부스 참여	2019.11.22.	2019.11.24.	완료
제1~6차 열린소통포럼 제안숙성회의	2020.6.5.	2020.11.3.	완료
제1~6차 열린소통포럼 개최(2020)	2020.5.28.	2020.10.29.	완료
열린소통포럼 2020 정책참여마당 "우리 지금 만나"	2020.10.16.	2020.11.6.	완료
열린소통포럼 2020 종합포럼	2020.11.6.	2020.11.6.	완료

연락처	
주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자	하보윤
담당 부서(과)/ 직책	국민참여혁신과/행정사무관
이메일/전화번호	1004qhdbs@korea.kr / 044-205-2425

관련자	정부부처/부서	
	시민사회단체 민간부문 다자기구 워킹그룹	해당 사항 없음
기타 정보		

<table>
<tr><th colspan="5">6. 참여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정부혁신 국민포럼 운영</th></tr>
<tr><td colspan="5">공약 이행 주기 : 2018. 9. 1. ~ 2020. 8. 31.</td></tr>
<tr><td>주관부처/담당자</td><td colspan="4">행정안전부 / 혁신기획과</td></tr>
<tr><td colspan="5">공약 내용</td></tr>
<tr><td>공공문제</td><td colspan="4">광화문 1번가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운영 전반에 걸쳐 국민들의 참여 요구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정부혁신도 이러한 흐름에 있어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이전 정부들의 정부혁신 추진 방식은 정부 주도적인 것으로 특징 지워지며 따라서 국민들의 참여는 제한적인 수준이었다. 그 결과 이전의 정부혁신은 정부 내부혁신에 그쳐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정책의 시작도 끝도 국민이라는 인식 하에 정책의 모든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의 뜻이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정부혁신의 기조로 삼고 있다. 이에 국민의 직접 참여가 정부혁신의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는 다양한 기제가 필요하다</td></tr>
<tr><td>공약 내용</td><td colspan="4">이 공약은 국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정부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버넌스 체계와 기제의 도입 및 적용을 목적으로 한다. 거버넌스 체계와 관련해서는 정부혁신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혁신의 주체로서 정책의 모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혁신 국민포럼, 정부혁신추진협의회와 정부혁신 전략추진단 등의 설치·운영이 추진된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대통령 훈령으로 정부혁신추진협의회와 정부혁신전략추진단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이 이미 마련되었다. 그리고 정부혁신 국민포럼의 운영을 지원하는 기제로 정부혁신 온라인 창구를 개설한다. 이 온라인 창구를 통해서는 국민관심이 높거나 의견수렴이 필요한 정부혁신과제를 선정하여 토론 및 찬반투표를 하게 되며 일정 인원 이상 공감 시 추진협의회 안건으로 상정되도록 한다. 정부혁신추진협의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진 과제에 대해서는 대통령 주재 정부혁신전략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한다.</td></tr>
<tr><td>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 활용 방법</td><td colspan="4">공약의 구체적인 추진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정부의 일방적인 정부혁신 정책수립 및 결정이라는 일반적 프로세스를 탈피하고 국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정책 개선 및 수립을 이끄는 주체로 정부혁신 국민포럼을 구성·운영한다. 그리고 국민포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별도의 전문 조직인 정부혁신추진단을 설립·운영한다. 정부혁신 추진단은 국민포럼의 전문적 운영 및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오프라인 토론이 필요할 경우 열린소통포럼, 혁신파크 등 혁신 공간에서 토론회 개최, 토론결과의 온라인 공개, 우수 결과의 추진협의회 안건 상정 등을 지원하게 된다. 그리고 온라인상으로 상시 공개되는 정부혁신 추진 실적 및 성과 모니터링, 의견제시 등도 정부혁신 국민포럼이 담당하게 된다. ②국민들이 정부혁신 평가 시 국민평가단 위원 자격으로 실제 평가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평가단을 구성·운영한다. ③정부혁신에 관한 국민제안을 접수·추천·검토·채택할 수 있는 온라인 채널을 구축·운영한다.</td></tr>
<tr><td>OGP 가치와의 관련성</td><td colspan="4">정부 투명성 확대 / 국민참여 확산</td></tr>
<tr><td>추가 정보</td><td colspan="4">해당사항 없음</td></tr>
<tr><td rowspan="2">이행 수준
(1개에 ○ 표시)</td><td>미착수</td><td>제한적</td><td>상당 수준 완료</td><td>완료</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구체적 활동내용</td><td colspan="4">○ 정부혁신 국민포럼단 출범 준비('18.8~9월)
○ 정부혁신 국민 참여 플랫폼 "제1기 국민포럼" 출범('18.10.11.)
- 효율적 포럼 운영을 위해 대표단(15명), 팀(분야별 5개), 운영위원단(110명) 구성
- 운영위원 전체회의 3회, 분야별(6개) 팀회의 11회, 대표단 회의 10회
○ 대국민 공모를 통해 열정적 참여자인 "제2기 국민포럼" 구성('19.10.11.)
- 참여기제의 대표성을 강화하여 대표단 16명, 팀(분야별 6개), 운영위원단(150명) 구성
- 운영위원 전체회의 1회, 분야별 팀회의 24회, 대표단 회의 10회</td></tr>
</table>

<table>
<tr><td colspan="2">향후 계획</td><td colspan="3">▪ 대국민 공모를 통해 열정적 참여자인 “제3기 국민포럼” 구성(‘20.11월)
▪ 제3기 정부혁신국민포럼 운영위원 전체회의 및 팀회의 운영(‘20.11월~)</td></tr>
<tr><td colspan="2">이행과제 현황</td><td>시작일</td><td>종료일</td><td>이행수준</td></tr>
<tr><td colspan="2">정부혁신 국민포럼단 출범</td><td>2018. 8월</td><td>2018. 9월</td><td>완료</td></tr>
<tr><td colspan="2">정부혁신 국민포럼 운영</td><td>2018. 10. 11.</td><td>지속</td><td>완료</td></tr>
<tr><td colspan="5">연락처</td></tr>
<tr><td colspan="2">주관부처</td><td colspan="3">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전략추진단</td></tr>
<tr><td colspan="2">담당자</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담당 부서(과)/직책</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이메일/전화번호</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2">관련자</td><td>정부부처/부서</td><td colspan="3">해당사항 없음</td></tr>
<tr><td>시민사회단체
민간부문
다자기구
워킹그룹</td><td colspan="3">해당사항 없음</td></tr>
<tr><td colspan="2">기타 정보</td><td colspan="3">해당사항 없음</td></tr>
</table>

7. 국민 다소비다빈도 식품별 유해물질(19종) 함유량 공개				
공약 이행 주기 : 2018. 9. 1. ~ 2020. 8. 31.				
주관부처/담당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해물질기준과 엄미옥			
공약 내용				
공공문제	환경오염, 기후변화, 식습관변화 등에 따라 식품에 포함된 유해물질의 노출량이 증가할 위험이 점차 커지는 가운데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식품 속 유해물질 오염수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유해물질이 식품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 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거나 부정적 정보가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공약 내용	이 공약은 국민 다소비·다빈도 식품에 포함되어 있는 유해물질(19종)의 함유량을 공개하고자 하는 것이다. 기후 온난화,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식품별 유해오염물질 함유량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공개된다. 이에는 식품 유형(품목), 제조·생산국, 생산지, 수거지역, 검출량 등의 원시자료가 포함된다. 식품의 유해물질 오염수준 공개를 통해 국민의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선택권이 국민들에게 부여될 수 있다.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 활용 방법	공약의 구체적인 추진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식품 속 유해물질 오염도를 5년 주기로 DB화하고 이를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유해물질 간편 검색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조사식품의 유형, 품목, 제조·생산국, 채취지역, 채취장소(대·중·소형마트·재래시장), 식품별 오염도 등의 상세정보를 포함한 학술·연구 목적의 다운로드용 파일을 제공한다. ③ 기준·규격 재평가 보고서를 공개하여 식품 섭취로 인한 유해물질 노출량과 그에 따른 관리방향을 국민들과 공유한다.			
OGP 가치와의 관련성	투명성 증진 / 시민참여			
추가 정보	년간 20,000건 이상 자료 DB화를 위한 추가 예산 확보 필요			
이행 수준 (1개에 ○ 표시)	미착수	제한적	상당 수준 완료	완료
				○
구체적 활동내용	국민 다소비·다빈도 식품에 대해 유해오염물질(19종)에 대한 오염도조사를 실시하고, 곰팡이독소 등 13종에 대한 함유량과 국민들의 노출수준과 그에 따른 관리방향을 공개하였다. 공개되는 정보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간편 검색 서비스의 검색 기능을 개선하여 식품별, 물질별, 연도별 함유량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식품안전섭취 가이드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하루 식사량을 입력하는 경우 유해오염물질 안전진단 결과와 그 결과에 따른 맞춤형 섭취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 계획	▪ 가정간편식(HMR) 등에 대한 유해오염물질(19종) 오염도 조사 ▪ 중금속 7종 오염수준 공개(간편검색, 학술용 자료, 재평가 보고서)			

이행과제 현황	시작일	종료일	이행수준
국민 다소비·다빈도 식품 오염도(19종) 조사	2018.1.12	지속	완료
곰팡이독소 8종 오염수준 공개 (간편검색, 학술용 자료, 재평가	2018.5.14	지속	완료

보고서)			
다이옥신, PCBs 오염수준 공개 (간편검색, 학술용 자료, 재평가 보고서)	2018.12.28	지속	완료
벤조피렌 오염수준 공개 (간편검색, 학술용 자료, 재평가 보고서)	2019.5.9	지속	완료
3-MCPD, 멜라민 오염수준 공개 (간편검색, 학술용 자료, 재평가 보고서)	2020.5.21	지속	완료

연락처		
주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		엄미옥
담당 부서(과)/ 직책		유해물질기준과
이메일/전화번호		miokeom@korea.kr / 043-719-3853
관련자	정부부처/부서	해당 사항 없음
	시민사회단체 민간부문 다자기구 워킹그룹	
기타 정보		

<table>
<tr><th colspan="5">8. 문화관광분야의 미래산업을 위한 데이터 개방</th></tr>
<tr><td colspan="5">공약 이행 주기 : 2018. 9. 1. ~ 2020. 8. 31.</td></tr>
<tr><td>주관부처/담당자</td><td colspan="4">문화체육관광부/양경철 사무관</td></tr>
<tr><td colspan="5">공약 내용</td></tr>
<tr><td>공공문제</td><td colspan="4">국내 방문 외국인들의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외국인들이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는 한국 문화관광정보는 부족하여 서비스 불만도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질 좋은 콘텐츠는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관리·활용할 수 있는 IT신기술 융합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결과적으로 단순정보 제공에만 집중하여 신기술에 문화데이터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반면에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문화데이터를 자기 플랫폼으로 서비스하는 사례는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스타트업이 콘텐츠를 구축하거나 여행관련 업체의 신기술 투자는 부진하다.</td></tr>
<tr><td>공약 내용</td><td colspan="4">이 공약은 신산업분야를 지원할 수 있는 핵심 문화데이터의 개방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관광공사, 국립중앙박물관 등이 개방하고 있는 주요 데이터는 공약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등 문화데이터 통합서비스를 위한 연계서비스 플랫폼의 구축도 이 공약에 포함된다.</td></tr>
<tr><td>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 활용 방법</td><td colspan="4">공약의 구체적인 추진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신산업분야(VR, AR, AI, Iot)를 지원할 수 있는 핵심 데이터를 확보하여 개방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체제 구축을 통한 지자체 핵심데이터 발굴이 적극 추진된다.
② 문화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수집·공유·활용할 수 있는 연계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에는 문화정보 메타데이터 표준화, 메타데이터 운영관리플랫폼 구축, 외부지식베이스(우리말사전-민족대백과사전 등) 활용 기반 시스템 구축, LOD기반의 주제별 문화데이터 DB구축(예:전통문양, 한식, 한글 등) 등이 포함된다.</td></tr>
<tr><td>OGP 가치와의 관련성</td><td colspan="4">투명성 증진 / 시민참여 / 정부 책임성</td></tr>
<tr><td>추가 정보</td><td colspan="4">- 관련정책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정책
- 관련사업 : 문화정보 중심 다부처 연계서비스 플랫폼 구축(2018~2021)</td></tr>
<tr><td rowspan="2">이행 수준
(1개에 ○ 표시)</td><td>미착수</td><td>제한적</td><td>상당 수준 완료</td><td>완료</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구체적 활동내용</td><td colspan="4">- (문화정보 연계 표준화) 다부처 문화정보 연계 메타데이터 표준분류체계
모델 수립 및 연계 데이터 표준·규칙관리시스템 구축
* 국제표준(Dublin Core, Schema.org 등) 메타 구성 체계 참조, 개체 중심의, 문화정보 메타 표준분류체계 모델 수립(문화 8대 분야 - 7개 개체 - 22개 유형 분류)
* 2011년 구축 ‘통합관리시스템(mdcenter.kcisa.kr)’ 비표준 문화데이터 대상, 다부처 메타 표준분류체계 적용 데이터 갱신 및 표준화 전환(약 78백만 건)
- (문화정보 연계기관 확대)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 문화정보 통합 연계 및 데이터 활용성 제고를 통한 보편적 대국민 문화정보 서비스 확산
* (‘18년) 60개 → (‘19년) 76개(누적 136) → (‘20년) 83개(누적 219)</td></tr>
</table>

<table>
<tr><td colspan="2"></td><td colspan="3">- (문화정보서비스 확대) 다부처 문화정보 통합 메타데이터 활용 분석통계 시각화(4종) 및 문화표제어(culture.go.kr/topic) 웹 서비스 제공</td></tr>
<tr><td colspan="2">향후 계획</td><td colspan="3">▪ 다부처 연계플랫폼 기반 중앙 및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대한 연계확대를 통해 문화분야 융·복합 데이터 발굴 및 개방
▪ 문화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 교육, 민간협력 강화,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문화데이터 민간 활용 촉진
▪ 가명정보 결합을 통한 문화분야 공공데이터의 개방 확대</td></tr>
<tr><td colspan="2">이행과제 현황</td><td>시작일</td><td>종료일</td><td>이행수준</td></tr>
<tr><td colspan="2">신산업분야 핵심문화데이터 개방 확대</td><td>2018. 9.</td><td>2021. 12.</td><td>상당 수준 완료</td></tr>
<tr><td colspan="2">문화데이터 개방·활용 민관협력 협의체</td><td>2018. 9.</td><td>2021. 12.</td><td>상당 수준 완료</td></tr>
<tr><td colspan="2">문화데이터 연계·공유 표준화 마련</td><td>2018. 9.</td><td>2021. 12.</td><td>상당 수준 완료</td></tr>
<tr><td colspan="2">지자체 연계서비스 플랫폼 구축</td><td>2018. 9.</td><td>2021. 12.</td><td>상당 수준 완료</td></tr>
<tr><td colspan="5">연락처</td></tr>
<tr><td colspan="2">주관부처</td><td colspan="3">문화체육관광부</td></tr>
<tr><td colspan="2">담당자</td><td colspan="3">양경철</td></tr>
<tr><td colspan="2">담당 부서(과)/ 직책</td><td colspan="3">정책분석팀/공공데이터 담당사무관</td></tr>
<tr><td colspan="2">이메일/전화번호</td><td colspan="3">kcyang19@korea.kr / 044-203-2374</td></tr>
<tr><td rowspan="2">관련자</td><td>정부부처/부서</td><td colspan="3">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td></tr>
<tr><td>시민사회단체 민간부문 다자기구 워킹그룹</td><td colspan="3">- 한국문화정보원(문화정보화전문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공기관
- 문화데이터 개방·활용 민관협력 협의체 : 한국문화정보원 운영예정</td></tr>
<tr><td colspan="2">기타 정보</td><td colspan="3"></td></tr>
</table>

9. 문화유산자원 공개로 국민의 신산업 육성 지원				
공약 이행 주기 : 2018. 9. 1. ~ 2020. 8. 31.				
주관부처/담당자	문화재청 / 최연규			
공약 내용				
공공문제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인 3D 프린팅 관련 산업에서 직접 활용 가능한 3D프린팅 데이터 등 고품질의 문화유산 3D 콘텐츠가 부족하여 일반인의 문화유산 접근이 어렵고, 고가의 3D스캔 장비 비용도 발생하고 있다.			
공약 내용	이 공약은 지진, 화재 등으로 인한 문화유산 멸실·훼손 시 원형복원을 위해 구축한 초점밀도 3D스캔 원천데이터를 3D 프린팅 등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로 변환, 개방하여 민간의 3D 프린팅 산업 등 고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 활용 방법	공약의 구체적인 추진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문화재청 및 소속·산하기관, 지자체 등에서 개별 구축한 3D 스캔 원천 데이터를 수집·변환하고, 국민 누구나 문화유산 관련 모든 3D데이터를 쉽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유산 3D포털 사이트 구축·운영('18.12월~)한다. 이를 통해 2018년까지 3D스캔 데이터(264건), 프린팅 데이터(100건), 점자 데이터(5건), 3D모델링 데이터 등 다양한 3D데이터 1,000여점을 개방한다. 이후 2019년에는 추가적인 3D프린팅 데이터(50건) 개방으로 공공데이터 1,500여점을, 2020년에는 2,000여점을 누적하여 각각 개방한다. ② 3D프린팅 관련 협회, 시·도교육청 및 대학, 박물관, 연구소 등과 산·학·연·정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분야의 맞춤형 3D콘텐츠를 제작하여 보급한다. 그리고 ③ 3D 스캔데이터 표준제작 지침 제작 등 3D 데이터 품질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OGP 가치와의 관련성	시민참여 거버넌스 형성 / 국민의 정보접근성 향상			
추가 정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이행 수준 (1개에 ○ 표시)	미착수	제한적	상당 수준 완료	완료
			○	
구체적 활동내용	▪ 문화유산 3D 데이터 299건 구축('20년) ▪ 문화유산 3D 포털서비스 구축 및 데이터 1,521건 개방('19.12월) ▪ 공공데이터포털, 국가문화유산포털 등 32,844건 활용('19.12월) ▪ 국제프린팅코리아 EXPO 문화유산 3D프린팅 경진대회('18년~) ▪ 국제문화재산업전 3D데이터 활용 특별전시('18년~) ▪ 디지털 문화유산 국제심포지엄 개최('19년~) ▪ 3D 스캔데이터 표준제작 지침 제작 및 고도화('18년~)			
향후 계획	▪ 국가지정 문화재 3,942건 3차원 정밀DB 구축('21~'25년) ▪ 문화유산 원형기록 데이터세트 구축 및 통합DB 구축{'20년~} ▪ 디지털 문화유산 국제심포지엄, 3D프린팅 경진대회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 지속			

이행과제 현황	시작일	종료일	이행수준
2018년 문화유산 3D DB 구축 추진 - 3D스캔 50건, 프린팅 50건 등	2018.4.18.	2018.11.14.	완료
문화유산 3D 포털서비스 구축 추진	2018.5.28.	2018.12.24.	완료
문화유산 주제 3D 프린팅 경진대회	2018.9.5	2018.9.8	완료

(제3회 구미 국제프린팅코리아 엑스포)			
2018 국제문화유산산업전 3D 활용 콘텐츠 특별전시(경주화백컨벤션센터)	2018.9.12.	2018.9.14.	완료
Digital Heritage 2018(샌프란시스코) 선진기술 교류 및 사례발표 - 문화유산 3D스캔 및 프린팅 등	2018.10.25.	2018.10.31.	완료
문화유산 3D 모델링 데이터 등 공공데이터 1,000여점 확대 개방	2018.12.1.	2018.12.24.	완료
2019년 문화유산 3D DB 구축 추진 - 3D 프린팅 50건 등 공공데이터 누적 1,500여점 개방	2019.4.1.	2019.12.24.	완료
2020년 문화유산 3D DB 구축 추진 - 3D 프린팅 50건 등 공공데이터 누적 2,000여점 개방	2020.4.1.	2020.8.31.	상당 수준 완료

연락처		
주관부처		문화재청
담당자		최연규
담당 부서(과)/ 직책		정보화담당관 / 담당 사무관
이메일/전화번호		onlyduck@korea.kr / 042-481-4752
관련자	정부부처/부서	문화재청,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담당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통부 3D관련 산업 및 기술담당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 현장학습담당, 전국 국공사립 박물관 전시담당
	시민사회단체 민간부문 다자기구 워킹그룹	문화재연구기관·학회 연구자, 문화재 관련대학(원) 학과 전공자 (사)3D프린팅산업협회, (사)한국3D프린팅협회, (사)3D프린팅강사협회 (재)게임인 재단 등
기타 정보		

<table>
<tr><th colspan="5">10. 민간 활용도 높은 고수요·고가치 국가중점데이터 개방</th></tr>
<tr><td colspan="5">공약 이행 주기 : 2018. 9. 1. ~ 2020. 8. 31.</td></tr>
<tr><td>주관부처/담당자</td><td colspan="4">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td></tr>
<tr><td colspan="5">공약 내용</td></tr>
<tr><td>공공문제</td><td colspan="4">○ 정부 투명성 확보 및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자원으로 공공데이터의 개방은 확대되고 있으나, 국민과 기업 등 민간의 체감 수준은 낮음
- 특히, 인공지능, IoT,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데이터의 수요 증가
○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 중 민간 수요가 높고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로 선정·개방하여 데이터를 통한 경제적·사회적 가치 실현
- 특히, 민간과 함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발굴 및 개방하여 공공데이터를 통한 새로운 경제적 창출을 지원</td></tr>
<tr><td>공약 내용</td><td colspan="4">○ 국민과 기업 등 민간이 원하는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개방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 기업 경쟁력 향 상, 정부의 데이터 기반 과학적 행정 및 투명성 향상
○ 민간의 공공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고려한 지능형·신산업 중심의 제2차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추 진 (e.g. ‘18년 : 혁신성장동력 육성, 사회안전망 강화, 정부 투명성 강화, 일자리 창출, 사회적 가치 확산 등 5개 영역 29개 분야 데이터 개방)
○ 민간 의견수렴 및 참여를 통한 국가중점데이터 추가 발굴, 선정 및 개방 추진(‘19～’20년)
○ (기대효과)
- 민간의 데이터를 활용한 기술·서비스 개발·향상 등으로 데이터를 통한 혁신 성장 지원
- 환경·안전·의료 등 국민 삶과 밀접한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관련 서비스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td></tr>
<tr><td>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 활용 방법</td><td colspan="4">○ 공공데이터 민간 수요조사를 통한 국가중점데이터 발굴, 선정 및 개방 추진
- 대국민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추가 국가중점데이터 후보 발굴
- 민간전문가(전문위원회 등) 검토를 통해 국가중점데이터 후보 발굴</td></tr>
<tr><td>OGP 가치와의 관련성</td><td colspan="4">○ (시민참여 활성화) 국가중점데이터는 국민과 기업의 수요에 근거하여 발굴하여 민간이 데이터 개방 의사결정에도 참여
○ (투명성 증진) 시민단체가 공공데이터를 통해 정부 정책, 제도, 메커니즘의 개선 및 견제를 통해 정부 투명성 향상</td></tr>
<tr><td>추가 정보</td><td colspan="4">○ 기타 정책, 전략 관련 : 2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2017~2019), 공공데이터 혁신전략(공공데이 터전략위원회, 2018.2), 공공데이터 표준화 및 활용 확대 방안(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18.4),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2018.3) 등</td></tr>
<tr><td rowspan="2">이행 수준
(1개에 ○ 표시)</td><td>미착수</td><td>제한적</td><td>상당 수준 완료</td><td>완료</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구체적 활동내용</td><td colspan="4">○ 제2차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 추진 완료</td></tr>
</table>

	- 인공지능·IOT 등 지능형·신산업 관련 63개 분야 데이터 개방 완료 (공간융합정보, 금융표준종합정보, 보건의료영상데이터 등) ○ 공공데이터 수요조사 실시(연중) - 민간기업, 협·단체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실시 * ('19년) 9회 17개 기업 참여, ('20.8.) 3회 16개 기업 참여 - 대국민 온라인 수요조사 실시('20.6.1.~6.30., 공공데이터 포털) ○ 제3차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 수립·추진 - 제3차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 제3차 국가중점데이터 계방계획 수립('19.12.) - 2020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대상 선정·추진('20.5.~)
향후 계획	▪ 제3차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지속 추진 ▪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대상 간담회 등 지속적인 의견 수렴

이행과제 현황	시작일	종료일	이행수준
지능형·신산업 중심의 제2차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추진	2017.1.1.	2019.12.	완료
대국민 수요조사를 실시	지속추진	지속추진	완료
민간전문가(전문위원회) 검토를 통해 국가중점데이터 후보 발굴	2019	2020.5.	완료

연락처		
주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자		신동화
담당 부서(과)/ 직책		공공데이터정책과/전산사무관
이메일/전화번호		044-205-2814
관련자	정부부처/부서	
	시민사회단체 민간부문 다자기구 워킹그룹	
기타 정보		

<table>
<tr><th colspan="5">11. 민간의견 수렴을 통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강화</th></tr>
<tr><td colspan="5">공약 이행 주기 : 2018. 9. 1. ~ 2020. 8. 31.</td></tr>
<tr><td>주관부처/담당자</td><td colspan="4">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td></tr>
<tr><td colspan="5">공약 내용</td></tr>
<tr><td>공공문제</td><td colspan="4">○ 국민과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고품질의 데이터와 표준화된 데이터의 부족으로 민간에서 공공데이터 활용에 어려움 호소
○ 공공데이터 표준화 확대 및 품질 향상에 대한 민간의 요구를 반영하여 공공데이터와 민간 데이터를 융·복합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지원</td></tr>
<tr><td>공약 내용</td><td colspan="4">○ 국민, 기업 등 공공데이터 이용자의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정책 참여 활성화로 고품질 데이터 확대 및 데이터 활용도 제고
○ 민간수요가 높고 다 기관 공통보유 데이터를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개방표준 및 오픈포맷 확대 (e.g. 민간 수요를 고려해 자율주행자동차, 스마트시티, 헬스케어, 스마트팜 분야 등 개방표준 분야 선정)
○ 이용자 의견 수렴창구를 상시 운영하여 공공데이터 품질 오류에 대한 이용자 요구사항을 적시에 반영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정책의 수립, 시행 및 결과(효과) 등 정책추진 전 과정에 민간참여
○ (기대효과) 공공데이터와 민간 데이터 간 자유로운 융·복합 지원, 국민, 기업 등의 데이터 가공 및 정제 비용절감 및 공공데이터 활용 가치 향상</td></tr>
<tr><td>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 활용 방법</td><td colspan="4">○ 공공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 개선 등에 대한 민간 수요조사 실시
○ 공공데이터포털 내 ‘공공데이터 품질오류 신고 창고’ 및 ‘데이터 1번가’ 등 민간 의견 수렴창구 상시 운영
○ 민간협의체 구성을 통해 품질관리 정책에 있어 민간 의견 수렴 진행</td></tr>
<tr><td>OGP 가치와의 관련성</td><td colspan="4">○ (투명성 증진) 행정업무 수행과정에서 생성·수집된 공공데이터는 일하는 방식의 투명성 제고
○ (시민참여 활성화) 민관협의체 구성하여 개방표준 제정 및 품질관리 정책 추진</td></tr>
<tr><td>추가 정보</td><td colspan="4">○ 기타 정책, 전략 관련 : 2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2017~2019), 공공데이터 혁신전략(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2018.2), 공공데이터 표준화 및 활용 확대방안(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18.4),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중장기계획(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2019.12.)</td></tr>
<tr><td rowspan="2">이행 수준
(1개에 ○ 표시)</td><td>미착수</td><td>제한적</td><td>상당 수준 완료</td><td>완료</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구체적 활동내용</td><td colspan="4">○ 다수기관이 공동으로 보유한 데이터에 대한 개방표준 120종 제정
- 민간 의견수렴을 통해 수요가 높은 주차장정보, 공중화장실, 지진해일 대피소 등 개방표준 120종 제정 및 표준데이터 개방
* 개방표준(누적) : (’16.) 79종 → (’17.) 109종 → (19.) 120종 → (20.) 122종
○ 공공데이터 품질 수준 제고를 위해 예방적 품질관리체계를 마련
- 공공부문 내 주요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시범적용하고, 민간의 데이터 전문가 및 사업에 참여 중인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품질관리 기준을 검토(‘20.5~)받아 관련제도 마련 중</td></tr>
</table>

	○ 공공데이터 이용자 의견 수렴창구 상시 운영 - 공공데이터 포털 내 '품질오류 신고', '데이터 1번가' 운영으로 공공데이터 이용자의 의견을 상시 수렴·반영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실시('18.~) - 전국 286개 기관(중앙행정기관·광역·기초지자체) 대상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실시 * 평가대상을 ('18.) 중앙·광역지자체 → ('19.) 중앙·광역·기초지자체 → ('20.) 중앙·광역·기초지자체·공공기관으로 확대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제정('20.8.) - 공공데이터의 용어·형식 등을 범정부 차원에서 표준화하여 공공데이터 융·복합 활용을 쉽게하고 데이터 설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 * 민간(국문국립국어원, 영문외국어대, IT 민간데이터전문업체) 및 공공부문 전문가 검토 및 대국민의견수렴를 거쳐 용어 정의
향후 계획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활용 실태 조사를 통해 활용도 높은 개방 표준 추가 제정 및 활용사례 발굴('20.11월~) ▪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된 전체 파일데이터 및 오픈API의 품질점검(~'20.12월)을 통해 보다 품질수준이 높은 공공데이터 개방('21년~) ▪ 데이터 가공 및 정제 비용절감 및 공공데이터 활용 가치 향상을 위해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확대 제정 및 예방적 품질관리체계 마련·운영('21년~)

이행과제 현황	시작일	종료일	이행수준
공공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개선 등에 대한 민간 수요조사 실시	연중	연중	완료
공공데이터 이용자 의견 수렴창구 상시 운영	연중	연중	완료
공공데이터 표준화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2018	계속	완료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시행 및 민간 품질심사원 등 참여	2018	계속	완료

연락처		
주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자		황인희
담당 부서(과)/ 직책		공공데이터정책과/전산사무관
이메일/전화번호		044-205-2812
관련자	정부부처/부서	
	시민사회단체 민간부문 다자기구 워킹그룹	
기타 정보		

12. 자발적 법규준수 기반의 관세행정 체제로의 전환	
공약 이행 주기 : 2018. 9. 1. ~ 2020. 8. 31.	
주관부처/담당자	관세청 혁신기획재정담당관
공약 내용	
공공문제	• 기존의 일방적인 강제조사, 세금추징과 단속·처벌 일변도의 관세행정 운영방식은 대규모 불복, 조세마찰 등 사회적 비용 증가와 사회적 갈등만을 조장하고 더 이상 이러한 방식으로는 국민 안전을 보호하는 임무와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어 앞으로는 현장의 이해관계자와 협력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방향의 관세국경관리 운영 방식으로 변화가 필요
공약 내용	• 정부는 이해관계자에게 수출입 신고오류·위반사항 등의 정보를 선제적으로 잘 알려주고, 이해관계자는 성실신고를 통해 법규 준수를 제고하는 방식으로 전환 • 불법·부정무역에 대한 행정지도 실시·단속예고로 불필요한 형사처벌을 지양하고, 세관이 제공하는 세액오류 정보에 따라 기업이 수입신고 세액을 정기적으로 자율 점검하는 「수입세액 정산제」 등 납세협력프로그램 확대 • 민관 협력과 자율적 법규 준수로 무리한 행정집행 유발을 개선하고, 국민의 법규 위반을 사전 예방함으로써 국민과의 정책공감대 형성 및 알권리 보장 • 선제적 정보 제공에 따른 자발적 법규준수를 통해 기업-정부-국민 간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수출입신고 정확성 향상으로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세국경관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신뢰도 제고와 국민 안전·안심 행정 구현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 활용 방법	• 세관은 수출입신고 자료 등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납세자 유형별로 맞춤형 신고안내 체계를 구축하여 실시간 접근할 수 있도록 관세법령포털에 등재·개방 • 납세오류 가능 정보를 기업·개인에게 공개·공유함으로써 착오없이 수출입신고할 수 있도록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업체별 납세지원정보 서비스 제공 • 인터넷 까페 운영자 등과 협력하여 해외직구물품 재판매, 짝퉁물품 판매 등 우범정보 게시글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해당 국민들에게 법규위반 가능성을 사전 안내함으로써 알권리 보장 및 처벌에 따른 사회적 갈등 예방 • 공약 이행 동력 마련을 위해 정부내부의 성과평가 체계를 기존 적발·단속·추징에서 성실신고지원 실적, 납세협력 프로그램 운영 실적, 사전계도 실적 등으로 과감하게 개편하여 운영 중
OGP 가치와의 관련성	•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던 행정운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정책 수요자, 협력자에게 필요한 수출입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여 알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관세국경관리를 위한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사회적 비용 및 갈등 증가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자발적 성실신고 향상을 유도하여 국민 안심 행정 구현과 더욱 안전한 국민생활 보장

<table>
<tr><td>추가 정보</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2">이행 수준
(1개에 ○ 표시)</td><td>미착수</td><td>제한적</td><td>상당 수준 완료</td><td>완료</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구체적 활동내용</td><td colspan="4">① 관세법령포털 DB 현행화(완료)
○ 법령정보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관세법령정보포털” 정비(‘18.10)
- 기존 유권해석과의 중복・상충여부, 내용의 유효성 및 외부공개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정비(824건 중 665건 공개)
- 내부에만 제한적으로 공개하였던 지시・지침에 대하여 외부공개 화면을 신설, 민원인에게 유익한 주요정보는 공개(1,408건 중 441건)
- 법령 조문별로 연관정보에 질의회신 사례, 지시지침, 불복·소송 결정례 등 등재, one-click으로 해당 조문과 관련된 모든 법령정보 습득

② 기업형 납세오류 가능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시스템 구축(완료)
○ 세법지식・인력 등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수입기업에게 스스로 납세오류를 점검하고 사후추징 등 경영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업형 납세오류 가능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 (제도 마련) 업체별 맞춤형 오류위험 정보 제공 관련 각종 규정을 신설* 또는 개정**하여 성실신고 업무 기반 마련
* 성실납세 지원을 위한 납세도움정보 제공 및 납세진단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19.4)
**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훈령(‘20.5.) 및 보정심사대상 선별 훈령 개정(‘20.7.)
- (시스템 개발) 모든 수입기업을 대상으로 납세오류를 진단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는 관세도움정보 시스템 개발(예산: 2.1억원)(‘18.7.～’19.11.)
* 〔1단계〕 진단시스템 구축 (18.7.~’19.2) ⇨ 〔2단계〕 웹 서비스 시스템 구축 (19.4.~11.)
- (조직 신설) 전국 34개 세관에 “성실신고 지원팀” 설치・운영(‘19.4..～)
○ 업체별 맞춤형 도움정보 서비스 제공 프로세스 마련
- (메일링 서비스) 관세도움정보 시스템 웹서비스 시스템 구축 이전 연간 수입규모 300억원 미만의 중소 규모 수입기업 중 납세오류 위험이 있는 230개 업체를 대상으로 메일링 서비스 제공(‘19.4.~12)
- (맞춤형 정보제공) 웹서비스 시스템 구축 완료(‘19.11.)에 따라 관세 도움정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요자 중심의 성실신고 안내 업무* 추진
* 세관 정보분석 결과 추출된 오류 위험정보를 납세자 주 사업장 관할세관에서 전담하여 제공

③ 산업별·품목별 오류사례, 체크리스트 제공 체계 구축(완료)
○ 관세도움정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모든 수입기업에게 산업별・품목별 오류사례와 Check List*를 제공(‘18.7월)
○ 기존 Check List를 보완하여 개발한「관세·무역 위험 항목 및 혜택 스스로 알아보기」자료를 관세도움정보 메뉴에 추가하여 제공(‘20.9월)

④ 본부세관별 연간 설명회 개최(상당수준 완료)
○ 납세도움정보 시스템 개통(‘19.11.)에 따라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회 방법 및 동 서비스 제도 등을 세관별로 안내</td></tr>
</table>

세관	일시	장소	참석 인원
인천	12. 5(목) 13:30~14:30	인천세관 대강당	41명
광주	12.11(수) 13:30~14:30	광주세관 회의실	36명
부산	12.12(목) 10:00~11:00	부산세관 대강당	53명
대구	12.12(목) 15:00~16:00	대구세관 회의실	20명

* 서울세관은 11.26. 개통식에서 설명 실시

⑤ 성실신고 가이드 북 발간(완료)

○ 관세행정 전문지식이 부족한 중소 수출입기업 등이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 흐름에 따른 전반 절차 및 지원정책 안내('19.10)

- 신설된 기업지원 제도 및 법령개정 사항 반영
- 국민의 관심이 높은 해외직구 통관 및 반품환급 방법, 여행자 휴대품 통관절차 등 '개인통관 안내'추가
- 통관흐름별 가이드라인 형식의 기업지원 프로그램 상세 안내

○ 사용자 활용도 제고를 위한 우리청 홈페이지, 교보문고 등에 e-book 무료 배포('19.10)

⑥ 중소기업 공인인증 획득 지원사업(상당수준 완료)

○ 공기업 등의 민간상생자금과 협업한 중소기업 공인지원 사업 실시

- 에너지 공기업(7社)과 관련 산업 및 지역 내 중소기업의 AEO공인 획득지원을 위한 MOU 체결(20.2.18)
- 공인 및 유지비용 부담 경감으로 중소기업의 제도권 진입장벽 완화

⑦ 법규 준수도 평가 기준 공개 및 교육(완료)

○ 법규준수도 증감요인을 非AEO기업까지 확대(감점요인) 공개('18.12)하고 이행여부를 모니터링하여 관세행정상 혜택을 차별화

○ 평가분야 · 항목 · 측정내용 등의 평가기준은 고시 개정을 통해 공개('18.12)

⑧ 자진신고 활성화 국민디자인단 운영(완료)

○ 2019년 국민디자인단 추진과제 전직원 공모 및 선정('19.2월)

- 선정주제 : "여행자의 지친 마음까지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 2019년 행정안전부 국민디자인단 지원 과제로 선정

○ 서비스디자이너,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국민디자인단' 구성(10명, '19.5월)

○ KIck-off 미팅 등 3회 모임 개최

회의목적	주요내용	일정
Kick-Off 미팅	상호인사, 과제설명, 추진일정 공유	19.6.19
관세행정 현장방문	업무브리핑, 해외여행자 입국절차 견학	19.6.25
아이디어 발굴 미팅	문제점, 개선방안 검토 회의	19.7.09

○ (향후계획) 서비스개선을 위한 프로토 타입 마련('19), 국민디자인단 성과 공유대회 참석('19.10)

⑨ 휴대품 신고 관련 국민인식도 조사(완료)

○ 국민생각함을 활용한 '휴대품 관세 자진신고' 인식조사 실시

	① 성실히 임하고 있다(18%) ② 어쩔수 없이 하지만 자발성을 떨어진다(47%) ③ 안걸리면 그만이란 생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30%) ④ 잘 모름(5%) ○ 자진신고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2018년 국민디자인단 과제)에 활용 ⑩ 정기수입세액 정산제 실시(완료) ○ 민-관 협력에 기반한 「수입세액 정산제도」 확대 시행 - 납세협력 의지가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정산업체 추가 지정('20.2) * 정산업체 현황 : ('17) 10개社 → ('18) 19개社 → ('19) 23개社 → ('20) 27개社 - 公益차원에서 公기업을 정산업체로 적극 흡수 * 공기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세청-에너지 공기업간 간담회 개최('20.2.18) ⑪ 법규위반 사전 안내 실시(온·오프라인)(상당수준 완료) ○ (규정 안내) 해외직구 증가에 편승한 구매대행자의 저가신고· 개인정보 도용 등에 대비하여 화주에게 정보*제공 * 신고번호, 해외거래처, 품명, 과세가격, 납부세액, 법규위반 주의 안내문 등(5월) - 특송화물 최초 수입신고화주에게 선적지역·품목·신고유형별로 구분하여 맞춤형 카카오톡 안내문자 발송(19,861건) ⑫ 관세범죄·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계도 활동 실시(제한적) ○ 경미한 해외직구 온라인 재판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계도하는 한편, 상습적 재판매 행위 방지를 위해 이력관리·단속 병행 - 재판매가 빈번한 물품 등을 반입하는 특송화물 수입 화주에게 반입신고 정보, 재판매 유의사항 등을 SNS를 통해 안내 ⑬ 오프라인 법규사전안내 홍보(완료) ○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오프라인 간담회(7.1)를 실시하고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환전거래시 준수사항 안내 ○ 주요 공항만에서 현수막·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총기류·실탄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 반입 차단을 위한 세관신고 캠페인 실시(6.29~7.10)
향후 계획	② 기업형 납세오류 가능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시스템 구축(심사) ○ (인적 역량 제고) 업무 담당자 대상의 전문교육과정 등 개설 - 일선세관 보정심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관세도움정보와 보정심사를 연계한 전문교육과정을 연수원에서 실시하고, 본부세관별 멘토 매칭 ⑥ 중소기업 공인인증 획득 지원사업(심사) ○ 지자체 · 공기업 등과 협업을 확대, 정부 부처간 협업을 통해 신규 지원사업 발굴 - 경기도, 구미시 등 중소 수출기업이 밀집된 지자체 등과 공인지원을 위한 신규 협업을 확대 · 추진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타부처 사업*과 공인획득 지원사업을 연계하여 시너지효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협의 추진 * (현행) 중기부 - '수출바우처' 사업 → (확대) 조달청 - 'G-PASS' 사업 연계 협의 ⑫ 관세범죄·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계도 활동 실시 ○ 온라인을 통한 해외직구 물품 재판매 행위, 불법물품 온라인 유통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전담인력 증원 추진 ⑬ 오프라인 법규사전안내 홍보 ○ 코로나-19로 인해 매년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실시하던 전국 순회 외환제도 설명회를 비대면 온라인방식으로 전환 실시(12월)

이행과제 현황	시작일	종료일	이행수준
① 관세법령포털 DB 현행화	2018. 7.	2018. 10.	완료
② 기업형 납세오류 가능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2018. 7.	2019. 상반기	완료
③ 산업별, 품목별 오류사례, 체크리스트 제공 체계 구축	2018. 4.	2019. 1.	완료
④ 본부세관별 연간 설명회 개최	2018. 9.	지속	상당수준 완료
⑤ 성실신고 가이드 북 발간	2018. 9.	-	완료
⑥ 중소기업 공인인증 획득 지원사업	연중	연중	상당수준 완료
⑦ 법규 준수도 평가 기준 공개 및 교육	2018. 12.	지속	완료
⑧ 자진신고 활성화 국민디자인단 운영	2018. 8.	2018. 11.	완료
⑨ 휴대품 신고 관련 국민인식도 조사	2018. 8.	2018. 9.	완료
⑩ 정기수입세액 정산제 실시	2017. 4.	지속	완료
⑪ 법규위반 사전 안내 실시(온·오프라인)	2018. 1.	지속	상당수준 완료
⑫ 관세범죄·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계도 활동 실시	2018. 1.	지속	제한적
⑬ 오프라인 법규사전안내 홍보	2018. 8.	지속	완료

연락처		
주관부처		관세청
담당자		박찬형
담당 부서(과)/ 직책		혁신기획재정담당관 / 행정사무관
이메일/전화번호		042-481-7715
관련자	정부부처/부서	관세청 혁신기획재정담당관, 심사정책과, 법인심사과, 조사총괄과 서울세관 사이버조사과 등
	시민사회단체 민간부문 다자기구 워킹그룹	‘인터넷포탈 까페(중고나라 등), 11번가 등 온라인상거래 업체 자동차협회, 섬유산업협회 등 주요 산업별 협회 관세행정 혁신 T/F 관세사, 물류업체 등 이해관계자
기타 정보		

VI 결론 및 향후 계획

제4차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의 이행 기간이 2020년 8월 종료됨에 따라 지난 2년간 추진된 공약을 점검하고 평가한 결과 전반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목표가 달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체 13개 공약 중 8개 공약이 완료, 4개 공약이 상당 수준 완료, 1개 공약이 제한적으로 이행되었다고 평가되었다.

그러나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 수립과 이행 전반에 걸쳐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지난 네 차례 2개년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을 수립과 이행을 충실히 하면서도, 변혁적인 공약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극복해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정부혁신 추진과 열린정부 활동 간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보다 많은 국민제안을 과제화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제안에 따라 장기적인 숙의 과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마다 동일한 제안을 같은 지점에서 시작하다보면 수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로써 차기 계획을 수립하는 준비기간 2년 동안 숙의를 해야한다는 교훈을 얻었고,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은 앞으로 워킹그룹 활동을 통해 채택되지 못한 제안을 상시적으로 숙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앞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OGP 제11대 의장국으로서 열린정부 가치를 구현하고, 국내외 시민사회와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2개년 국가실행계획 수립 등 국내 활동을 충실히 함과 동시에 열린정부 모범국가로서 다양한 열린정부 분야를 선도하고, 성과를 국제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